

中國의 韓半島 政策* (中國의 韓半島 統一影響力)

이명수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요 약>

9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人民解放軍의 현대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 및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시킬 수 없음을 물론이고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한다. 중국의 對韓政策은 그의 세계전략, 국가이익, 장기목표, 대내관심, 대북관계 정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政策 또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 안보환경 및 역학구도와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에 관한 제반 대외정책도 중국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입장에서 살펴본데 대해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China's Policies toward South Korea

Lee, Myung So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bstract>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ing rapidly and the Chinese Army has become more modernized since the 1990s. China's Korean policies represent its world strategy, national interest, long-term goals, domestic interest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 on.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China's represent national security interests,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조성에 의한 것임.

dynamics of power and other facto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we need to choose effective policies to make use of China's role and status in northeastern Asia, to promote regional security and South-North Korean reunification.

I. 序 論

東아시아는 현재 새로운 변혁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무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西歐圈이었으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국제정치의 場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무대 이동이다.

태평양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지난 15년간에 걸쳐 국제정치면에서 놀라운 변화와 경제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을 비롯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며 국제시장에서 교역량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은 미국의 최대교역량으로 40%에 이르는 경제발전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간 7%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3위의 軍事大國으로 부상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南進팽창은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이미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 구체화되고 일본·인도 등 주변 강대국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중국의 군사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무기, 장비의 개선을 통한 '원거리 작전능력'의 강화이다. 2000년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1998년 장쩌민(江澤民) 당주석의 공약에 따라 3년간 무려 15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신무기 도입과 기술력의 전력강화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그기와 핵잠수함, 구축함 등을 도입, 공군의 작전범위를 남사군도(南沙群島)까지 미치는 2000km로 넓혔고 해군의 작전개념을 '遠洋海軍'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에는 대련(大連)에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도크도 완공하였다.

둘째는 남동해안지역에서의 군사력증강과 군사훈련 강화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군사균형(military balance) 2000년판에 따르면, 중국은 96년 이후 대만의 대안(大岸)에 동평(東風)-15, 동평-11, 동평-21 등 중거리미사일 150~200기를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사정거리 8000km의 동평-31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발해만 부근에서 행해지던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대신, 광둥(廣東)군구와 난징(南京)군구가 참여하는 남동부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중국 국방비 추이

(단위 : 억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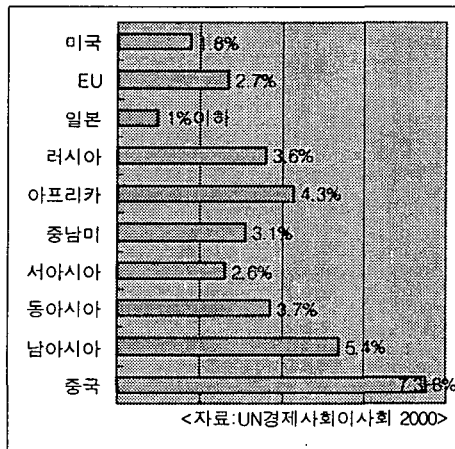
1997년	812	1999년	1076
1998년	934	2000년	1212

<자료:미국 해외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2000>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자국선박의 해상수송로(sea-lane)를 확보하고,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등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역안보 및 한반도통일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冷戰기간동안 중국은 세력균형 및 反蘇전선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소련 붕괴이후 전략적 초점은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서 지역내 불안정이 그들의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거대한 국토 및 인구,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군사력 증강 등은 중국이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경제에 주요세력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표 2> ■ 200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표 3>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괄호안은 성장률, %)

구분	1999년	2000년
국민총생산	9,869 (7.1)	10,798 (8)
수출	1,949 (6.1)	2,492 (31.5)
수입	1,658 (18.2)	2,251 (36)
외환보유고	1,547 (6.7)	1,656 (7)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0>

9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人民解放軍의 현대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 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 및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통일에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시킬 수 없음을 물론이고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고 있다.¹⁾

중국의 對韓政策 또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 안보환경 및 역학구도와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에 관한 제반 대외정책도 중국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II. 中國 外交政策의 변화

중국은 전통적으로 中華主義(Sino-Centrism)로 무장된 나라이다. 기원전부터 '세계의 한 가운데 있는 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온 中華의 개념은 타자의 자주성을 중국과 병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천하세계'속에서 모든 문제를 보아왔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이 외세의 영향아래 놓여있을 때에도 이러한 정신은 줄곧 유지되었고 중국혁명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이른바 '중국적 특색'을 강조하면서 외부세계의 문화를 흡수해 왔다. 현재의 대외정책 노선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역할과 기능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정책적으로도 실용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중국의 모든 외교정책은 '無變이 萬變이다'(변화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정불간섭과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 경제외교가 중점이 되고 있다. 특히 大中華經濟圈³⁾ 중국의 경제적인 요구 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때 이러한 추세는 한반도에서도 관철될 것이다.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반응(situation-response)접근방법과 國益(national interest)접근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중국이 처하고 있는 국내상황, 예를 들면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실각에 따른 지도층내부의 권력투쟁,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 사회적 혼란과 정신오염의 정도 국제질서의 변화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중국의 국가이익, 즉 정치 사회적 안정, 경제적 발전, 외부침략으로부터의 영토보존,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지니는 단점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느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상황에 대한 해석과 국익에 대한 정의는 기계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문화, 현재 중국의 지배적인 이데

1) Robert S. Ross, "Introduction : East Asian in Transition", Robert S. 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55, pp.21~22.

2) 이희옥, "중국계 자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 大中華 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서울:도서출판 프레서, 1996), pp.369~371.

3) 對中華經濟圈은 반드시 화교상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중국 경제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다만 중화경제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중화경제권은 국제경제론에서 말하는 제도화된 경제통합(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아니며, 서로 다른 경제적 실체가 합하여 大經濟區를 지향하는 개념을 말한다.

올로기, 지도자 개인의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對北韓政策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지도부의 인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념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중국은 외교의 대원칙으로 마오쩌둥(毛澤東)시대부터 내려오는 △내정 불간섭 △상호 주권존중 △비동맹 등 이른바 ‘평화공존5원칙’을 적용해 왔다. 중국은 다른 나라 內政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겸 당위원회 서기인 쏘수리(孫叔林)교수는 “원칙주의가 현대 중국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크고 일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원칙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는 데는 세가지가 고려된다. 첫째는 大局을 살피는 것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처방이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나중에 해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둘째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하나의 지역세력으로서 경제개혁에 필요한 대외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정치 및 안보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재는 사안의 성격과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매우 신축성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외교정책의 결정은 첸지천(錢基琛)외교부장과 같은 기술관료들이 종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中國의 外交政策은 內政에서 뿐만 아니라 外政에서도 實事求是가 실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⁵⁾ 이러한 사례중의 하나가 2008년 베이징(北京)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또 한번 국가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금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2년 말 제16기 공산당대회에서 黨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젊고 국제화된’ 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여기에 올림픽개최를 위해 엄청난 자금으로 국토개조사업을 할 경우 중국은 모든 면에서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표 4> KOTRA가 발표한 베이징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건설철 등 중국 내수진작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 기대 -첨단디지털 설비, 환경 관련 상품, 통신장비, 스포츠 용품 특수 예상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징검다리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기술 및 노하우 이전에 따른 문화 경제 교류 확대
부정적 효과	-다국적기업과 한국기업간 경쟁 격화로 채산성 악화 우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중국으로 몰려 한국의 외자 유치 위축 가능성 -올림픽을 통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기업들의 수출 위축 우려

특히 內政에서의 변화된 모습은 2001년 중국공산당 80들을 맞이하여 공산당의 당명⁶⁾까지를 포함한 일대 변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중국현대사는 마오쩌둥(毛澤東)이 공산당의

4) 김병문, “한·중 관계정상 이후 중국의 대북한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통일국제세미나」 (2000, 11), pp22~23 참조.

5)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서울:법문사, 1995), pp.128~136 참조.

6) 중국에서 공산당의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장쩌민(江澤民) 당주석의 정치고문인 왕다오한(王道涵)이 상하이 일부 학자들과 함께 ‘세계의 사회민주연구보고’를 내놓을 무렵이다. 이는 중국이 97년 제15차 당대회를 통해 사유경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99년 헌법을 수정해 사유경제를 법률적으로 보장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국 후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문화혁명의 어두운 굴레를 벗어 던지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어낸 중국공산당의 21세기 변모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론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창할 쯤에 중국공산당의 당명 변경 필요성이 사실상 잉태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정치변화의 흐름 속에 江주석은 금년 2월 광둥(廣東)시찰 때 ‘3개대표론’⁷⁾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인민이 가지는 함의(含意)이다. 중국이론계는 공산당이 대표하는 인민이 과거의 노동자 농민에서 이제는 지식인과 과학자는 물론 심지어 사영기업가(자본가)마저 포함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공산당 구호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기엔 다당제를 배제하고 일당제를 지향하려는 중국의 고민이 스며있다. 공산당이 다른 정당의 탄생을 허용치 않고 공산당 일당만으로 중국인민 전체를 끌어낸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서구처럼 양원제나 다당제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

중국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볼 때 다당제 시행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 중국을 분열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江주석은 “다당제가 실시되면 곧 민주화는 아니며 또 올바른 정치개혁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덩리칭(鄧力群) 등 소수파는 “3개대표론은 공산당이 사영기업주의 이익마저 대변, 모두 끌어안겠다는 것이지만 그렇게되면 이제 공산당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로 인해 올해 초에야 공산당 명칭 변경이라는 혁명적 발상이 검토되는 단계를 맞은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여러 대안가운데 유럽의 사회민주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중이라고 중국의 이론계 인사들은 말한다. 서구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도 집권까지는 사회민주당에 강하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서 중국은 당명 변경으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준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꿀 경우 중국사회에 엄청난 정치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의 영도가 없었다면 중국현대화도 없었다는 의미는 6천5백만 중국공산당원들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건재해 온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와 중국현실에 맞게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념이나 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鄧小平)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의미를 더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이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다. 빈부격차, 노동간격차, 파룬궁(法輪功)문제, 인민의 정치개혁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영기업의 비약적 성장은 공산당 창당 취지마저 의심나게 만든다. 중국을 경제하는 미국을 비롯, 많은 국가들의 도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⁹⁾

7) 3개 대표론이란 △선진사회 생산력발전 △선진문화 발전방향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 등 세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8) 중국공산당이 사(私)기업인들에게 당 문호개방을 선언한데 이어 헌법에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을 명기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금까지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등 제한적인 권한만을 인정해왔던 중국사회의 소유체계에 큰변화를 예상하는 것이다. 2001.7.1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공산당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사기업인의 입당허용을 선언했다. 당 문호개방 문제는 올 가을 黨15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5기 6중전회)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9) 문화일보, 2001. 1. 17일자 참조.

<표 5> 중국공산당 80년 역사

■1921.7.23	상하이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34.10~35.10	대장정
■49.10.1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66.8.1	중공 8기11중전회 문화대혁명 개시 결정 (66~76)
■76.9.9	마오쩌둥 사망, 사인방 체포
■78.12	사회주의 4대 현대화(개혁·개방)선언
■89.6.2	천안문 사태
■97.2	덩샤오핑 사망
■2000.2	장쩌민 '3개 대표론'주창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지도자들은 정치, 군사적 大國化¹⁰⁾를 서슴치 않고 최근 10년간 일본군사비¹¹⁾가 8%에 그친 반면 중국은 70%나 증가되었다. 그 결과 국방예산 규모는 일본과 격차가 거의 좁아진 상태이다.

<표 6> 세계국방-경제지표(97년말현재)

국가명	순위	국방예산 (백만달러)	현역군인수 (명)
미국	①	272,955	1,447,600
러시아	②	64,000	1,240,000
일본	③	40,891	235,600
중국	④	36,551	2,840,000
프랑스	⑤	41,545	380,800
영국	⑥	35,736	213,800
독일	⑦	33,416	347,100
이탈리아	⑧	21,837	325,200
사우디아라비아	⑨	18,151	162,500
한국	⑩	14,732	672,500

<자료 : 뉴욕타임스지 연감 1998>

10)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이른바 '정간정편(精簡整編)'이라하여 군살빼기를 통한 정예화 편성에 따라 11개군구를 7개군구로 정비·통합하고 36개 보병군은 24개 합성집단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서방기술의 동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11) 2000년 확정된 일본의 신방위력 정비계획은 △P3C 대함 초계기와 CI수송기 후계기 개발(3천 4백억엔) △최신에 미사일 호위함 이지스함 2척 도입(2천8백억엔) △초계 헬기 탑재항모급 호위함 3천5백톤급 2척 도입(1천9백억엔) △공중급유기 4대 도입(9백억엔) △정보기술 혁명에 대비한 소형경량 전차개발(5백억엔) △요격전투기 F15현대화(2백50억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1.6.6.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금년부터 향후5년간 투입할 일본의 방위예산은 총25조 1600억엔(260조)에 달한다.

이는 종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소양국의 초강대국 형태에서 중국이 가세함에 따라 세계주도권의 양상이 3파전으로 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독주나 우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은 90년 걸프전 때 강대국과 협조하기로 동의한데서도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유엔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문제 처리에 있어 「의장성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전자는 중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면서도 그들의 현대화 계획에 미칠 피해를 우려한 협조라면 후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므로써 중국의 위상은 물론, 북한의 후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영향력의 행사라 하겠다.

금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혁명적 정치목적 을 위해서 행사하기 보다는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국가적인 권익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 발휘 될 것이다.¹²⁾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지위획득을 위해 유엔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소극적인 참가보다는 폭넓은 간여를 통해 국제질서의 창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¹³⁾

Ⅲ.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李鵬총리의 언급에서의 함축된 의미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련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한반도 전체상황 즉 한반도의 안정유지 및 긴장완화 가능성에서 모아야 할 것”¹⁴⁾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중국에게 막대한 손실은 물론, 아무런 준비없는 전쟁에의 개입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 중국의 개입은 엄청난 군사적 대가는 물론, 오랜기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대국 및 아시아

12) 全樂熙, “중국의 군비증강과 동북아세력균형”, 大陸研究所, 제3권2호, 「中國研究」(1995년, 여름), pp.12~27참조.

13) 李鵬, 중국총리가 93년 3월 5일 全人大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중국 9.5계획 장기 목표요강」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1인당 국민총생산은 2000년까지 80년의 4배로, 2010년엔 2000년의 배로 늘린다. 목표달성을 위해 鄧小平의 「중국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이른바 당의 기본노선, 기본방침, 9개 중요지침(9條方針)을 견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경제성장 방식을 祖方型에서 集約型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기간의 거시통제목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8%, 물가상승율은 경제성장률이하로 억제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실천되고 있다. 이중 9條方針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일정책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등한 담판과 쌍방의 대표과견후 의견교환을 한다.
- ② 우편교류와 통상·왕래·친척방문 및 여행을 실시하며 학술문화, 체육교류의 협의를 한다.
- ③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자치권 보유를 인정받고 자체의 군대보유를 인정받는다.
- ④ 대만의 현행사회와 경제제도는 생활방식 및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불변이다. 사유재산과 기업 소유권은 합법적인 계승권과 외국의 투자도 침해 받지 아니한다.
- ⑤ 대만당국과 대표인사들은 국가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대만과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자원을 받을 수 있다.
- ⑦ 대만인의 본토 거주권을 인정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한다.
- ⑧ 대만 상공업계 인사의 본토 투자와 영리활동을 보장한다.
- ⑨ 조국통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대만의 각 민족·인사·민중단체들의 건의와 의논을 환영한다.

14) 人民日報, 1988.7.4

국가들과의 관계가 일시에 무너진다. 또한 새로운 한국전쟁은 기존의 동북아지역의 균형상태가 파괴 될 수가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일시에 무너짐을 적극 방지 할 것이다. 당분간 미래가 불투명한 한반도는 긴장완화 및 현상유지가 중국의 國益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북한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지속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이며 등거리정책을 견지 할 것이다.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한반도정세의 급변은 중국으로서는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당사자의 화해와 교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환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북아 질서재편에 대해 확실한 전망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자국의 영향력 감소와 발언권 약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연말 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의 방북은 중국이 일단 북·미, 북·일 관계개선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보탬이 되고 그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하지만 이와같은 대외적 입장과는 달리 미·북 관계가 개선되어 진다면 불안한 심리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抗美援朝'열풍으로 중국과 북한은 특수한 관계임을 대내외에 과시했고 북한에도 이와같은 관계임을 주지시켜 왔다. 올브라이트 前 미국무장관의 방북직후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은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들은 생사고락을 같이했고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친선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동시에 초하오렌국방부장 등 군사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케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들은 마치 냉전시대 북·중간의 '혈맹관계'를 복원하려는 듯한 태도로 비쳤고 심지어 50년전예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임을 과시하는 듯 했다.

이에 답하듯 금년 11년만에 이루어진 장쩌민(江澤民) 당주석의 2박3일간(2001.9.3~9.5)의 방북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두 사회주의체제의 정상간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하였다. 금번 양 체제 정상간의 만남 속에 대한 의의와 그것이 장차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¹⁵⁾

첫째, 북·중 관계의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이다. 그러나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으로서의 혈맹관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이익 공유를 위한 관계회복과 우호관계의 확립이라는 점이다. 북한을 통한 한·미·일 삼각관계의 대중포위 전략에서 북한을 전위 내지는 동조세력으로 규합하고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전통우방의 확고한 지지아래 對南韓 및 對美정책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되었다.

둘째,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訪러와 江主席의 訪北으로 전통적인 북방삼각동맹관계의 기본틀이 재구축 되었다. 이는 북방삼각관계가 자연스럽게 북한을 다루기 위한 한·미·일의 대북 삼각공조에 대응하는 지역안보협력의 성격을 지니게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안보에 대한 방어벽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김위원장으로서는 江主席의 답방을 통하여 訪러에 이은 그의 정치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對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보다 자신감 있게 처리 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시를 통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

15) 김영하, "강택민 방북과 한반도", 통권제53호, 「아태평화포럼」 (2001년9월호), pp1~4참조.

정의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 시켰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강조함으로써 일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간접적으로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만약 남북정상 2차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중국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균형자 및 조정자에서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역할이 확인 될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유지와 백성의 경제적 생존이라는 양대문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 북방삼각관계의 전통적 우호관계의 틀 속에서 체제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지 않았다.¹⁶⁾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는 강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 中國의 對 韓國 統一觀

중국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남북한 통일실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반도통일 자체가 긴장완화를 보다 증진시키거나 정착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통일의 달성보다는 통일에 이르는 긴장완화의 해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 및 韓中間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감안한다면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불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통일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게 될 보다 강력한 독자적인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정책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대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¹⁷⁾가 중국의 고심 거리이다.

중국은 무력에 의한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통일한국을 선호할 것이나 명백한 체제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씩 서둘지 않으면서 남북한 쌍방은 이에 적응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한간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정치적, 군사적 대치 및 상호불신으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모순과 대립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和解와統一’은 동의어로 간주되며 화해는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중국은 화해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지한다. 더구나 최근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간여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南과北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붕괴를 가져오는 ‘월남방식’ 혹은 흡수통일식인 ‘독일통일방식’은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韓民族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¹⁸⁾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16)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북한으로서는 발표된 내용에 구속되어 행동의 제약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점과,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게하여 북미관계개선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이 들어있다.

17) Alger D. Wilhelm, Jr., "Sino-Korean Relation : The Year After",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99.

18) 李英吉, “交流承認 이후 韓國의 對 中國政策”, 韓國國防研究院, 第32號, 『國防論集』 (1995. 겨울) pp.20~55참조.

2. 中國의 對 北韓 統一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일본, 러시아, 미국 및 한국사이에 있는 전략적 완충지로 여겼던 것이다. 美·中 및 中·러 관계가 향상된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향권내에 두면서 하나의 정치적 동반자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정책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달성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문제국가로 남겨두기 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입장에서 북한은 동북아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므로 능동적인 對北政策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김일성 死後 권력의 공백에서 오는 체제불안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고 김정일 체제를 신속히 승인하는 한편, 2000년 그의 訪中時 개혁과 개방을 권유하고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정체성의 위기는 철저한 사상통제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음을 조언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평화결재 실시를 유보하는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江澤民主席은 抗美援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중국과 북한간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수한 위치를 對內外에 과시하고자 하였고, 넷째,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고 나아가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확대 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무력에 의한 체제보장보다는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체제유지라는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의세를 배제하고 당사자 해결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섯째,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북의 미·일 개선에 중재자로서 자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중국은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대내외적 입지를 강화시켜 남북한간이 세력균형을 회복케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¹⁹⁾ 그렇지만 북한의 급속한 對美·日관계개선은 현재까지 중국이 누려온 북한에 대한 기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自國의 통제 범위 안에 묶어 두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金正日국방위원장의 금년 1월5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을 방문한 것이 그를 수행한 黨 軍간부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과거 중국의 개방정책을 비난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부중심의 일관된 개혁개발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부러움의 대상인 동시에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측이 지난 80년대 말부터 북한측에 계속 개방개혁을 강조한 것도 있지만 공산당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과의 제반조건은 크게 다르다. 중국의 12억 인구나 풍부한 자원, 시장, 막대한 화교자본 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베트남과 같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가기에는 체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19) 김영문, 앞의글, pp.28~29.

<표 7> 아시아지역 공산국가 개방비교

중국	라오스	베트남
·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개방정책을 20년에 걸쳐 진행함	· 86년 베트남과 함께 신경제 매카니즘 채택	· 86년부터 도이모이(쇄신) 정책추진
·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개방정책	· 시장개방과 민영화 정책 추진	·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와 함께 규제완화
· 黨이 엄청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독자적 추진		· 93년부터 외자 본격 유치 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
· 연해지역에서 내륙 낙후 지역으로 확산		·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해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

이와 같은 점에서 김위원장이 박정희식 ‘개발독재모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어낸 박정희 모델이 북한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김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국가중심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²⁰⁾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어디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다는 북측의 현재입장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꾀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년 5월 김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²¹⁾을 한달 여 앞두고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장쩌민 당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지난 9월3일 장주석의 訪北을 통해 對南·對美 대화재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북한측에 표명할 수 있었다는 관측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장주석의 방북이 김위원장의 訪러²²⁾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북·중·러로 이어지는 북방삼각공조를 공고히 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남방삼각공조의 대립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의 동북아정세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관측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장쩌민주석의 북한방문은 김위원장이 訪러 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북한사회를 변화로 이끌어 장기적인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것이다.²³⁾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파악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20) 문화일보, 2001.1.17.

21)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총5개항의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내용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22)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 5일~6일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총 8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중 관심이 되는 항목은 ⑦항으로, 최고 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며,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관련한 북남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23) 연합뉴스, 제12798호, 2001.9.6.

<표 8>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현안	중국의 입장
북-미 대화 재개	공식입장 표명은 없으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국 정부의 판단)
주한미군	외국군대의 주둔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이나, 지역 안정을 위한 현실적 역할 인정. 통일 이후의 미군 위상에 대한 관심과 우려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전 세계의 전략균형과 군비통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강력 반대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더욱이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 들어와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 시대의 구체적인 대외정책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매우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개방화정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²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적인 화해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로 인한 수세적 외교기반을 만회하는 한편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면서 체제유지와 발전을 추진하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체제는 대외관계에 대해 종래와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크게 두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일과, 둘째,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이후의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면서 외교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흔히 '순치(脣齒)·혈맹(血盟)'관계로 일컬어져 있다. 1949년 10월 수교한 이후 1950년 한국 전쟁 때 중국은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기치아래 57개 사단, 85만 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패퇴하는 북한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이후 북·중 관계는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다소의 소강상태도 있었지만 대체로 친선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중국이 과거의 우호관계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6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고위급 대표단으로서는 처음으로 5일간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대표단은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인데다가 시기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개막(1998.9 헌법개정)과 때를 같이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방문은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김위원장의 지난해 5월 및 금년 1월의 중국방문에서 북한 언론들은 △ 두 당, 두 나라 사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경험교환 △ 전통적인 북·중 친선을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문제 △ 국제정세를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24) 최근 외국기업들의 평양사무소 개설이 부쩍 늘고 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BB그룹은 금년 6월 28일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ABB측은 이 사무소를 창구로 북한에서 전력망 현대화 사업과 발전소 등 전기장비 제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기업들도 최근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평양에 공동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독일계 기업들도 북한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북한경제정보원이 작년 10월 평양에 기술과학센터를 연이어 금년 6월 독일 민간기업들이 평양사무소 개설허가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있음은 분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부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북·미 관계가 냉각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의 밀착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한·중간에 노력해야 할 과제로서는 북한을 빠른 시일 내에 고립과 폐쇄된 사회에서 개혁과 개방된 세계쪽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한·중간의 진전되는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는 중국측에 이의 기대를 예견해 볼 수 있다.²⁵⁾ 왜냐하면 첫째, 중국과 북한간에 1961년 7월11일에 체결된 「中·朝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아시아와 세계평화수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제4조에는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간에는 900km 이상 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예기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여파는 중국에도 파급될 수 있으며,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개방정책과 경제발전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과의 사회주의 형태국가로 북한정권수립 이래 줄곧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국가이며, 김정일 체제안정, 유지에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로서 1978년 이후의 중국상황을 북한은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국은 북한이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유일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중국의 우정어린 對北韓 충고와 설득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외교적 협력은 양국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평화통일 촉진에 격의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韓·中關係 변화전망

중국의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死後 우려했던 중국의 정세는 장쩌민(江澤民) 집권 하에서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고도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는 鄧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경제정책의 성공이 실패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지도부와 人民간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익숙했던 중국정치가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의 상황전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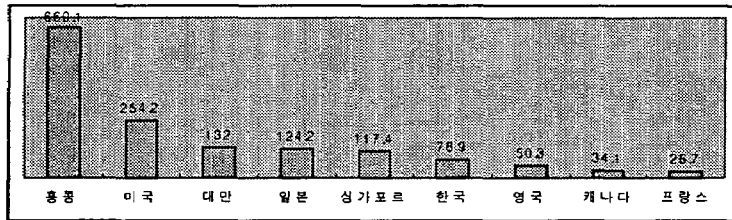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체제로서 정권의 안정을 기하면서 개혁개방의 정책을 계속해 갈 것이다. 공산당은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 할 것이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집착은 사라져서 대만의 국민당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영기업에서는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어 소유권은 형식상 全人民 소유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기업처럼 운영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한국발전 모형처럼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25) 이지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의 외교적 협력방안”, 한국외교협회, 제28호, 「외교」(1993.12), pp.102~107.

26) 중국정치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보다 지도자 개인의 통치이념에 좌우되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성향을 지닌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장차 누가 권력의 핵심부가 될 것인가가 중국정치 노선의 향방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지도부는 장쩌민 지도하에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타협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는 다원화되고 경제는 시장경제화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중국의 신 지도층을 형성하는 관료 기술층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꾸준한 경제발전이 숙명인 중국으로서 는 그토록 바라던 2008년 베이징(北京) 하계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각각 확정되었다. 특히 WTO가입(2001년 7월 3일)이 확정되던 날 베이징(北京)에서는 주룽지(朱鎔基)총리 주재로 전국외자(外資) 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朱총리는 “외국 자본 유치를 기업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연한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도 대폭 개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624억 달러였다. 98년에 521억 달러, 99년에는 412억 달러로 90년 중반이래 대체로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왔다.

<표 9> 1997~2000년 주요국 대중국 직접투자
(단위: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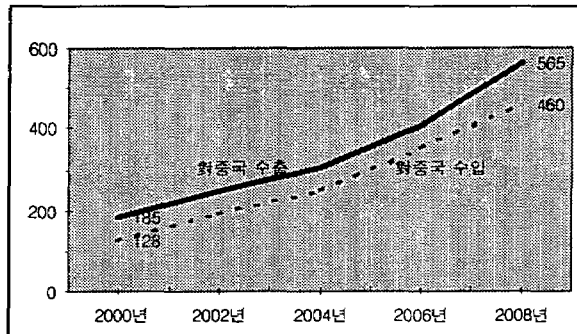


<자료:중국대의경제무역연감 2001>

WTO 가입과 함께 외국자본의 對 中國 투자진출은 더욱 급증할 전망이며 그 동안 중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각종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투자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대내외 정치안정에 무엇보다 신경 쓸 것이다.

한편 한국도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경제발전을 생각 할 수가 없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면에서 밀착관계이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면이 우선 시 된다. 이런점을 고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차츰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 남북관계 개선 및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을 입지 해야 할 것이다.

<표 10> 산자부가 예상한 對중국 수출입 전망
(단위:억달러)



이제 세계에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一國二體制(one nation two system)의 유연한 통일방안을 대만 측에 제시하여 중국통일에 주도권을 행사하여 온 중국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통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중국은 1992년 韓·中수교 당시부터 한반도문제가 한민족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데는 한반도문제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약화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주변 四強 중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를 맺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다른 주변국 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²⁷⁾

이러한 중국의 정책노선은 한국정치라는 이질적 상황과 배경 하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가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다. 특히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사회주의체제를 골간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중국적 사회주의는 향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와의 절충적 형태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교정책에서는 주체와 등거리외교를 구사했지만 실제적인 사회주의 현대화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을 답습했고 최근에는 중국식의 개방과 개혁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사회주의 발전과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있어서도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V. 結論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21세기 국제사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현재까지는 군사적·경제적 강대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힘의 논리가 아닌 국제정세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과 외교관계의 긴밀함이 국가의 고립을 막고 위상을 높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운명은 한반도를 둘러싼 四強의 권력구조 및 세력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1880~1945) 권력구조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제국주의 세력들의 세력균형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냉전양극체제(1945~1960)에서는 東西冷戰의 완충지대로 국토가 분단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맛 보았다. 긴장완화 다극체제(1969~1990)에서는 한국은 강대국들의 긴장완화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단상황이 고착화 되어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러 양극체제에서 중국이 가세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세력구조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것은 강대국들에게는 긴장완화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구적, 평화적 구조상태가 그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냉전의 분단상태를 계속 지니게 한 채 평화적 통일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운명은 四強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유지를

27)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중국의 입장과 전략 그리고 對中협력유도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4집1호, 『국제정치연구』 (2001.6), p.107.

위한 국제정치체제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어온 점을 부인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장차 한반도문제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상호협력관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四強들은 남북한정부가 통일을 달성하는데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긴장 완화와 균형 즉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는 견제하겠지만 평화적 통일은 지지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표명은 한반도 통일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나설 것이다. 政經分離原則을 고수하는 중국의 정책을 심분 활용,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스포츠 등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제 남북한 어느 한쪽도 다른쪽에 귀속시키는 통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 東歐 공산권의 붕괴가 독일의 흡수통일로 이어지자 중국은 한반도에서 이와같은 형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국은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북한에 대한 기존 영향력과 안보에 대한 기존 영향력과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구비한 통일한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력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당시 중국은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 통일된 직후 소련이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他山之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보다 현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며 변화가 온다 하여도 오랜시간에 걸쳐 四強의 개입없이 남북한 이해당사자가 평화적으로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궁극적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외세개입이 불가피 할 경우 자신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중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도 변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 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개방이 체제변화를 가져올까 두려워 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체제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중국은 북한에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변화 및 諸般 수용태도에 달려 있다.

미·중·일지도자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받아들임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다. 중국은 북한체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통제된 개방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큰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으로서도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한미관계 공조는 북중관계의 공조에 도움되고 미중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통일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중국을 비롯 미·일·러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한층 더 가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신창, 『북한학 원론』 (서울 : 을유문화사1998)
2. 김영문, “한·중관계정상 이후 중국의 대 북한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통일국제 세미나」 (2000, 11)
3. 김영하, “등소평의 정치리더쉽의 연구 - 개혁적 리더쉽의 형성을 중심으로 -”, 대륙연구소, 「중국 연구」 (1994. 가을)
4. 김영하, “강택민 방북과 한반도”, 통권제53호, 「아태평화포럼」 (2001년 9월호)
5. 김용욱, 『한민족의 평화통일론』 (서울 : 대왕사, 1995)
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7.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 중국의 입장과 전략 그리고 대 중협력유도정책 -”,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제4집1호, 『국제정치연구』 (2001, 6)
8. 안병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안보론』 (서울 : 법문사, 1986)
9.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서울 : 법문사, 1993)
10.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서울 : 법문사, 1995)
11. 오일환외, 『현대 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12. 이영길 “교류승인 이후 한국의 대 중국정책”,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995, 겨울제32호)
13. 이지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의 외교적 협력방안”, 한국외교협회, 제28호, 「외교」 (1993, 12)
14. 이희옥, “중국제 자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 大中華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서울 : 도서출판프레스, 1996)
15. 전략회, “중국의 군비증강과 동북아 세력균형”, 대륙연구소, 제3권2호, 「중국연구」 (1995년, 여름)
16. Algerd D. Wilhelm, Jr., “Sino-Korean Relation : The Year Afte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IV, No.1, Summer 1992
17. Robert S. Ross, “Introduction : East Asian in Transition”, Robert S. 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5